

현안 보고

통일외교사회정책실  
수석연구위원 이윤식

# 대미투자 이행 갈등과 한미동맹의 신뢰 위기

2026년 9월 28일

# 대미투자 이행 갈등과 한미동맹의 '신뢰 위기'

## - 3,500억 달러 합의의 구조적 부담과 경제안보 리스크 -

2026. 9. 28. (월) 통일외교사회정책실장 이 윤 식

- 2025년 11월 한미 간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합의가 개별 사업의 이행 단계에 진입하면서, 막대한 투자부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국익 확보 여부가 핵심 과제로 부상
  - 합의 이후 투자 집행과 사업조건 조율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측 불만이 누적되고, 투자 갈등이 산업·통상을 넘어 한미 간 정책적 신뢰와 주요 안보현안의 협상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위험
  -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강조해 왔으나, 이행 일정과 대미 메시지를 충분히 조율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첫 사업의 최종 계약조건과 한국 기업의 참여범위, 수익배분·위험분담 구조 등도 여전히 검증 과제
- 대미투자의 성패는 투자 약속의 조기 이행이나 정상회담의 발표 내용이 아닌, 3,500억 달러의 부담에 상응하는 경제적·산업적·전략적 실익을 실제로 확보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
  - 원금 회수와 수익성, 한국 기업의 수주·기술협력·시장진출은 물론, 조선·원전·첨단산업 및 안보 분야에서 확보한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사업별로 검증
- 따라서 국회 차원의 국익 검증을 강화하고, 경제·통상·산업·안보를 포괄하는 범정부 동맹관리 체계를 구축해, 추가적인 경제·안보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대미 협상력으로 전환할 필요

### I. 문제 제기: 투자 부담에서 동맹 신뢰의 문제로

- 2025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MOU로 구체화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합의가 개별 사업 선정과 이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이 '부담할 비용'과 '확보할 국익'을 검증해야 하는 국면에 진입
  - 총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2,000억 달러는 전략적 투자에 배정됐으며,<sup>1)</sup> 전략투자에는 年 200억 달러의 집행 한도와 '상업적 합리성' (투자금 회수와 적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 원칙이 적용
  - 합의 당시 제기된 외화조달·투자손실·국내산업 영향에 대한 우려는 이제 개별 사업의 수익성과 한국 기업의 참여조건을 따지는 실질적 검증 과제로 전환

1)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ember 13, 2025.

- 특히, 9월 22일 정부가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를 첫 대미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 보고를 마치면서, 대미투자는 합의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실제 사업의 경제성과 투자위험을 평가하는 단계에 진입
  -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은 후속 사업으로 검토 중이나, 한국 기업의 참여범위와 세부 투자조건 등은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태
- 문제는 대미투자 합의 이후 이행 지연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누적되면서, 관세협상의 후속 과제와 안보협력까지 한미 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
  -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강조해 왔으나, 합의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투자 일정과 사업조건을 미국과 조율하지 못한 경위 관련 설명은 미흡
  - 9월 22일 뉴욕 정상회담 이후에도 첫 사업에 대한 양측의 공식 발표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 간 협의가 실제 투자 집행으로 연결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
- 본질은 대규모 투자부담을 수용하고도 이행 갈등을 조기에 관리하지 못한 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전략적 실익마저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음
  - 조선·원전·첨단기술 분야의 산업협력과 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투자부담을 평가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
  - 사업별 수익성과 실질적 반대급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 갈등까지 장기화한다면, 한국은 투자비용과 동맹관리 비용을 동시에 부담해야 할 위험
- 따라서 지금은 ‘대규모 투자 약속이 구체적 국익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이행 과정의 갈등이 한미동맹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종합 검증해야 할 시점
  - 본 보고서는 대미투자 이행 과정의 ‘4가지 간극’을 규명하고, 협상관리와 정책조율의 문제 및 경제적 마찰의 안보 분야 파급 위험을 분석한 뒤, 대미투자의 국익 검증과 한미 경제안보 협력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II. 대미투자 이행과 한미 간 ‘4대 간극’

### ① 이행의 간극: 합의 이후 장기화된 투자 지연과 미확정 조건

- 2025년 대미투자 합의 이후 첫 사업의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미국 측 불만이 표면화됐으나, 사업별 집행 일정과 핵심 계약조건은 현재까지 미확정
  - FT는 9월 10일 투자금 집행 지연에 대한 워싱턴의 불만을 보도했으며,<sup>2)</sup> 정부가

2) “Will South Korea follow through on \$350bn deal with Trump?”, *Financial Times*, September 10, 2026.

첫 사업의 국회 보고를 준비하던 9월 중순에도 양국은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과 투자조건을 놓고 협의를 지속

-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절차를 이행 지연의 이유로 설명해 왔으나, 합의 체결 이후 실제 집행에 필요한 조건을 언제부터 어느 수준까지 조율했는지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
  - 특히, 9월 17일 외교장관은 발표 지연이 ‘양국 간 이견보다 국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21일에는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지연 경위에 관한 정부 설명의 구체성이 요구
  - 9월 22일 한국 측 첫 사업 추진 결정과 국회 보고 이후에도 미국의 최종 승인과 실제 집행 절차가 남아 있어, 합의 이후 상당 기간 이행 일정과 핵심 조건을 정리하지 못한 경위와 정부의 협상관리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 ② 사업의 간극: 전략적 필요와 경제적 실익

- 첫 사업으로 제시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는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지만, 장기 수익 전망을 뒷받침할 최종 계약조건을 검증할 필요
  - 총사업비는 약 223억 달러로 제시됐으며, 정부는 장기 운영에 따른 수입을 전망하고 있으나 전력 판매계약과 최종 금융구조, 수익배분 및 손실부담 조건이 실제 투자수익을 좌우할 핵심 변수<sup>3)</sup>
  - 특히 예상 매출과 투자수익을 구분하고,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여부와 구매자 신용도, 그리고 자금조달 비용을 따져야 함
- 후속 사업인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에는 투자수익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적 실익을 둘러싼 협상 과제가 중첩
  - 원전사업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와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한국형 APR1400의 참여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세부 조건은 미확정 상태
  - 알래스카 LNG 역시 대규모 사업비와 장기 수익성, 한국 기업의 참여범위 및 위험분담 조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
- 미국의 에너지·제조업 투자 수요가 한국 기업의 수주와 시장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투자 규모의 확대가 곧 한국의 경제적·산업적 실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

3) 우지은·김동현·하지현, “산업부 대미투자 국회 보고…‘1호 텍사스 가스발전·2호 원전·3호 알래스카 LNG’”, 『뉴시스』, 2026. 9. 22.

[표 1] 대미 전략투자 주요 사업별 추진 현황 및 핵심 쟁점

| 구 분       | 추진 현황                                    | 핵심 쟁점                                 |
|-----------|------------------------------------------|---------------------------------------|
| 텍사스 가스발전  | 1호 사업 선정(*최종 승인 대기 중),<br>총사업비 약 223억 달러 |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금융 구조,<br>수익 실현       |
| 미국 원전 8기  | 후속 사업 협의 중                               |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협의,<br>한국형 원전 및 기업 참여 |
| 알래스카, LNG | 후속 사업 검토                                 | 사업비 부담, 장기 수익성, 위험분담                  |

### ③ 정책의 간극: 산업투자와 대미 메시지

- 대미투자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국내 반도체·AI 투자계획 발표가 미국 일부 당국자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대미 정책소통과 발표 시기 조율의 문제가 표면화
  -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9월 10일 인터뷰에서 ‘국내 투자계획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들의 불만을 자극했다’고 설명
  - 국내 산업투자의 필요성과 별개로, 대미투자 이행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사전에 파악했는지, 투자 일정과 국내 산업정책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점검할 필요
- 문제는 국내투자 자체가 아니라, 대미투자 이행 지연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국내 정책 발표가 추가적인 마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 ④ 신뢰의 간극: 투자 갈등의 통상현안 확산

- 대미투자 이행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기업규제와 반도체 투자 등 다른 경제현안에 대한 우려와 중첩되면서, 개별 사업의 갈등을 넘어 한국의 대미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우려
  - 앤드루 여 석좌는 ‘투자 지연과 쿠광 등 미국 기업의 대우를 둘러싼 문제가 한미 관계의 마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
  - FT 역시 투자 집행 지연에 대한 워싱턴의 불만과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요구를 함께 보도하면서, 투자 문제가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산업정책 및 기업 투자계획과 맞물리고 있음을 지적
- 대미투자에서 시작된 마찰이 다른 경제현안과 중첩될수록 개별 사업의 협상은 상대국의 정책 의지와 예측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로 확대
  - 결국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를 넘어, ‘합의를 어떻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익과 동맹 신뢰를 함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

### III. 대미관계의 구조적 취약성과 동맹 신뢰의 약화

#### ① 협상관리의 한계: 국익 보호와 합의 이행의 충돌

- 대미투자 이행 갈등에서 핵심 검증 사안은 미국의 투자 요구보다, 정부가 3,500억 달러 합의 이후 이행 일정과 사업조건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했는가에 있음
  - 막대한 투자부담을 수용한 이후에도 사업별 수익배분과 한국 기업의 참여범위 등 핵심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 측 불만과 한국의 투자위험이 동시에 확대
  -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안정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익 보호장치이나, 이를 협상 지연과 대미 소통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볼 수는 없음
- 특히 합의 체결 당시의 이행 구상과 실제 사업 추진 일정 사이에 발생한 차이를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관리와 대미 소통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
  - 9월 22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사업별 최종 계약과 한국 기업의 참여조건이 남아 있는 만큼, 협상 성과는 투자 약속이나 발표 내용이 아니라 최종 계약에서 확정된 경제적 부담과 산업·기술·안보 분야의 실익을 기준으로 평가

#### ② 경제안보의 연계: 투자 갈등의 안보 분야 파급

-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투자와 안보 현안을 연계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 이행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넘어 안보 등 다른 동맹 현안으로 협상 부담이 확대될 우려
  - 투자 집행 지연에 대한 미국 측 불만과 한국의 대이란 협조 문제, 연합훈련 관련 논란이 비슷한 시기에 제기되면서, 경제현안의 마찰이 안보 분야의 협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부각
    - 다만, 투자 갈등이 개별 안보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만큼, 사안 간 인과관계와 정부의 대응 경위를 구분해 검증할 필요
- 대규모 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협상관리 역량이 중요
  - 9월 22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협력과 핵잠수함, 핵연료 관련 권한, 저작권 전환 등은 후속 협의의 구체적 진전과 확정된 성과를 각각 확인해야 함
  - 투자 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안보 분야의 양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협상의 목표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분야별 후속 합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

### ③ 정책조율의 취약성: 대미 메시지와 전략적 일관성의 부재

- 대미투자 갈등은 산업·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하나의 대미전략 아래 조율하는 정부의 정책조정과 대미 메시지 관리가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의문을 제기
  - 국내 산업투자 발표를 둘러싼 대미 메시지 논란은 개별 부처의 정책 결정이 통상·외교 현안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국내 반도체·AI 투자 확대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위한 정책이지만, 대미투자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 일부 당국자가 그 발표를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제기
- 대미투자·미국 기업 현안·중동 안보협력 등 서로 다른 의제가 한미 간 협상에서 연계되는 만큼, 개별 부처 중심의 대응으로는 대미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
  - 필요한 것은 사안마다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현안관리’를 넘어, 경제·산업·안보의 협상목표와 대미 메시지를 일관되게 조율하는 ‘동맹관리’
  - 주요 국내 정책의 대미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처별 협상 결과가 다른 분야의 국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조율체계를 강화할 필요

### ④ 동맹 신뢰의 약화: 거래비용 증가와 대미 협상력 저하

- 한미동맹의 위험은 개별 현안의 이견 자체보다 갈등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의 정책 의지와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데 있음
  - 동맹의 제도적 기반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투자·통상·안보 현안에서 양국 간 마찰이 반복될 경우, 한국의 합의 이행 의지와 대미정책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
- 정책적 신뢰가 약화되면 동일한 합의에도 추가 설명과 협상이 필요해지고, 다른 현안에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재확인해야 하는 ‘거래비용’이 증가
  - 투자·통상·안보가 연계되는 환경에서 이러한 ‘신뢰비용’의 누적은 한국의 대미 협상공간을 제약
  - 투자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충분한 산업적·전략적 실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부담과 동맹관리 비용을 동시에 떠안을 위험
  - 이에 대미투자는 사업의 손익을 넘어, 경제적 부담을 산업적 기회와 동맹의 전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국가적 협상·동맹관리 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IV. 향후 방향 - 국익 검증과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과제

### ① 대미투자 국익 검증의 제도화

-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국익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투명한 점검체계를 구축
  - 첫 사업은 현재 미국의 최종 승인과 계약조건 확정이 남아 있으며, 원전·알래스카 LNG 역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투자 결정 전후의 검증이 중요
  - 사업별 경제성·산업적 실익·외환시장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와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제도화
- 투자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한국 산업에 돌아오는 실질적 반대급부를 국익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
  - 한국 기업의 수주와 시장 진출, 기술협력 및 공급망 참여 성과를 사업별로 확인하고 최초 사업성 평가와 최종 계약조건 사이의 차이를 검증

[표 2] 대미투자 국익 검증의 '4대 기준'

|        | 핵심 확인 사항              | 국회 검증 방향             |
|--------|-----------------------|----------------------|
| 재정·외환  | 연도별 투자액, 외화조달, 손실부담   | 자금조달 및 위험관리계획 점검     |
| 투자 수익  | 원금회수, 수익배분, 계약조건      | 사업성 평가 및 계약조건 검증     |
| 산업적 실익 | 한국 기업 참여, 기술·시장 접근    | 국내 산업 파급효과 점검        |
| 전략적 실익 | 조선·원전·첨단기술 및 안보 협력 성과 | 투자와 연계된 합의 및 이행실적 점검 |

### ② 한미 의회외교와 신뢰 기반 확대

- 행정부 간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 의회·주정부·산업계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투자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양국의 공동이익을 구체화
  -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고용과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면서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별·산업별 협력 의제를 발굴
- 투자 이행에 대한 미국 측의 의구심은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사업 성과로 해소하되, 합의 이행 의지와 불리한 사업조건의 수용은 명확히 구분
  - 사업성과 한국 기업의 참여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국익 기준에 따른 조정을 협의

### ③ 대미투자를 '경제안보 패키지'로 전환

- 3,500억 달러의 투자부담을 개별 사업의 손익계산에 머물게 하지 않고, 조선·원전·반도체·AI·에너지·공급망을 포괄하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과 연계
  - 조선업 협력과 전략투자를 각각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 제조업·에너지 투자 수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결합하는 협력사업 발굴
  - 원전 협력에서는 지분투자과 함께 한국형 원전의 미국시장 참여, 제3국 공동진출, 기술·지식재산권 문제의 안정적 해결 등 장기적인 산업적 성과를 검토
- 사업별 투자 승인과 한국 기업의 수주, 기술협력, 공급망 참여 등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연계해 투자 약속을 실질적인 협상자산으로 전환

### ④ 동맹관리의 제도적 보완

- 경제·통상·산업·안보 현안을 하나의 대미전략 아래 조정하는 범정부 차원의 동맹관리 체계를 강화
  - 주요 국내 정책의 대미 파급효과를 사전 점검하고, 부처별 대미 메시지와 협상목표의 일관성을 확보해 투자 약속을 산업경쟁력과 대미 협상력으로 전환
- 경제적 마찰이 안보현안의 협상환경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경제안보와 전통적 동맹현안을 함께 관리하는 <고위급 한미 전략협의 채널>의 실효성 제고
  -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투자·조선·핵연료·전작권 관련 후속 협의의 추진 상황을 분야별로 확인하고, 경제협력의 진전과 안보협력의 성과를 구분해 평가
  - 대미투자의 성패를 조기 이행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확보한 산업적 실익과 동맹의 전략적 편익을 기준으로 평가